

정책수혜자별로 알아 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

소상공인 · 자영업자편



기획재정부

'일자리 안정자금' 지원 확대

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만원 인상해, 월 15만원 지원합니다.



2018년

지원대상 월평균보수	상용, 주40시간미만	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
	일용	1일/ 87,000원 미만
지원금액	상용	1인당/ 월 13만원
	일용	15일 이상 근로자 경우에만 일수에 비례 지급
정기 지급일	매월 10, 12일	

2019년

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
1일/ 97,000원 이하
(5인미만)1인당 월15만원 (5인이상)1인당 월13만원
10일~14일 근로일수액에 대해서도 지급 (8만원)
매월 15일

※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음



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jobfunds.or.kr)

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

• 자영업자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1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.

※2021년까지

대상

소비자 대상 업종 연 매출액이
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

범위

신용카드, 직불카드,
(기명식)선불카드, 현금영수증

※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.

공제한도

연간 500만원 → 1000만원 확대

✓ 우대공제를 적용기간(2021년까지 연장)

간이과세자인
음식·숙박업

발급금액의 2.0% → 2.6%

기타업종

발급금액의 1.0% → 1.3%

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(044-215-4326)



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

-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2,400만원 미만에서 3,000만원 미만으로 높입니다.

※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.

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(044-215-4326)

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

- 영세자영업자의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을
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

예정고지
납부면제
기준금액

30만원

TAX

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(044-215-4326)

주택월세 세액공제 신설

•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.



대상

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

요건

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
세대주(또는 세대원)가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임차

공제

연간 750만원 한도로 주택월세액의 10%,
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% 세액 공제

※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

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(044-215-4216)

소공인 지원 업종을 제조업 전체로 확대

-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(25개)으로 대폭 확대합니다.
이에 따라,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
소공인특화지원 주요내용

1.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· 운영
2. 공동기반시설 구축 · 운영
3. 성장희망사다리 구축
4. 제품 · 기술가치 향상



소공인특화지원사업

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특화지원센터, 공동기반시설,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장을 촉진하고,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, 제품 · 기술 개발(개선) 등을 지원하는 사업



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
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확대

- 3월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합니다.

지원규모 확대



연 500명

지원한도액 상향



최대 100만원

연 2000명

최대 200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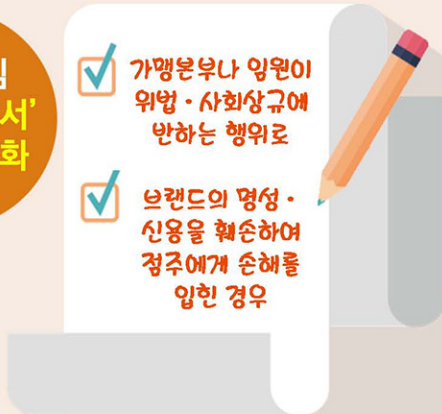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
‘오너리스크’ 배상 책임 명시 의무화

-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위법·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·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


배상책임
'가맹계약서'
기재 의무화

- 
- ☒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·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
 - ☒ 브랜드의 명성·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


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(044-200-4947)

대형유통업체, 납품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

- 4월 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.

4가지 주요 갑질 행위

- ① 상품대금 부당 감액
- ② 부당반품
- ③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
- ④ 보복행위



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(044-200-4950)

대형쇼핑몰·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

- 4월17일부터 대형쇼핑몰·아울렛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습니다.

- ✓ 부당한 행위 :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,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
- ✓ 제재 : 시정조치, 과징금 등

적용대상

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
1,000억원 이상 사업자

매장 면적의 합계가
3천㎡ 이상인 사업자



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(044-200-4950)